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
	배포일시	2021. 6. 1.(화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강성습, 사무관 이정식, 사무관 배성희, 주무관 안규빈 • ☎ (044)201-3863, 3865, 3866	
보 도 일 시		2021년 6월 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1.(화) 1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

- 3년간 사망자 26.4% 감소, 보행자 사망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

평균 대비 2배 높아 -

- **황성규 2차관 교통안전공단 방문 보행자·이륜차·사업용 등 안전 총력 당부** -

□ 정부가 '18년 1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('18~'22)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,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(△26.4%, '17. 4,185명 → '20. 3,081명)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\* ('17) 4,185(△2.5%) → ('18) 3,781(△9.7%) → ('19) 3,349(△11.4%) → ('20) 3,081(△8.0%)

○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'18년, 42년만에 처음으로 3천 명대로 줄어들었으며, 이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. 특히,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.7%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.

\* '03~'07(5년간 평균 △3.1%) / '08~'12(5년간 평균 △2.6%) / '13~'17년(5년간 평균 △4.9%)

○ 이에 따라,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\*도 '17년 8.1명에서 '20년 5.9명으로 개선되었으며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균('18년 5.6명)에 근접하고 있다.

□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,

\* '17. 8.5명(32/35위) → '18. 7.3명('18, 29/36위) → '19. 6.5명('19, 26위) → '20. 5.9명('20, 23위)

※ '19~20년 순위는 '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와 비교한 순위

○ 특히,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는 1,488명(3년 평균, '17~'19)으로서 전체

사망자의 약 40%(17~19)를 차지하고 있다.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균(20.5%) 대비 2배 높은(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27/28위) 수준이다.

□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**교통안전 종합대책**(18.1~)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해왔다.

○ 그간, 안전속도 5030 시행(4.17),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안전 시설을 적극 확충하고, 음주운전 처벌·기준 강화(19.6)\* 및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·신호등 전면 확충하는 한편,

\* 도로교통법 : 면허 정지 0.05%(혈중알콜농도) → 0.03%, 면허 취소 0.1% → 0.08% 등

○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국비 지원(20.1),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·홍보 등 각종 대책\*·과제를 지속 추진해왔다.

\*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(20.1),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(20.4),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(20.10) 등

□ 아울러, 지난 3월,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, 화물차·이륜차 등 취약 분야 안전 강화를 포함하는 「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」(3.25)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.

○ 이에 따라,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산하고,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 확대, 횡단보도·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 강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,

-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토록 하고,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도 신고·정비·검사·폐차 등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, 생활물류법(21.7) 상 이륜차 배송업 인증제를 도입 및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배달업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,

-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게시간 준수 점검 등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- 이러한 교통안전에 관한 역량 집중과 더불어 사람 우선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·참여가 더해지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은 6월 1일(화)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, 교통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, 상주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빗길·빙판길에서의 급제동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운전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황 차관은 “그간 공단이 사업용·이륜차·보행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 확보와 교통안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”며 관계자를 격려했다.
- 또한, “‘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”고 하면서,
- “장마철 등 빗길 안전사고와 빙판길 연쇄 추돌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,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- 이와 함께, “전기·수소차 보급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, 결함조사 역량 제고와 검사 역량 확충 등 미래차의 운행안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사무관 이정식(☎ 044-201-3863), 사무관 배성희(☎ 044-201-38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